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 전태일3법 쟁취투쟁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5. 전 조합원 전태일3법 쟁취투쟁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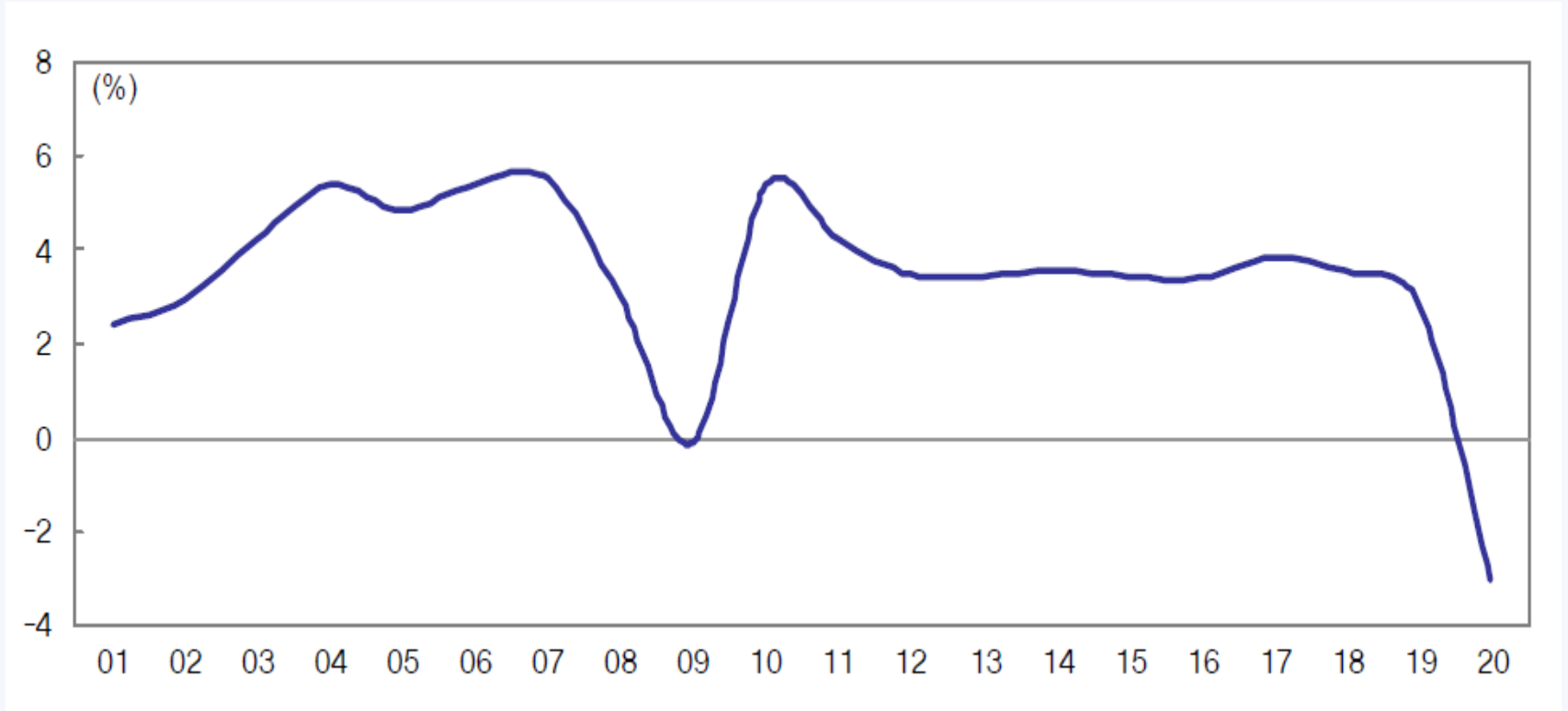
코로나19  
경제 동향

세계 경제

특징

- 코로나19, 빠른 세계 전파
- 경제, 글로벌 연계성 → 수출입 타격
- 대규모봉쇄조치 실물경제 위축 뚜렷
- 감염병 종식 시기 예측 어려움
- 금융시장 등 불확실성 확대

세계 경제 성장률



출처 : 5. 15. 기획재정부 그린북  
2020 성장률은 4. 14. IMF 전망치 반영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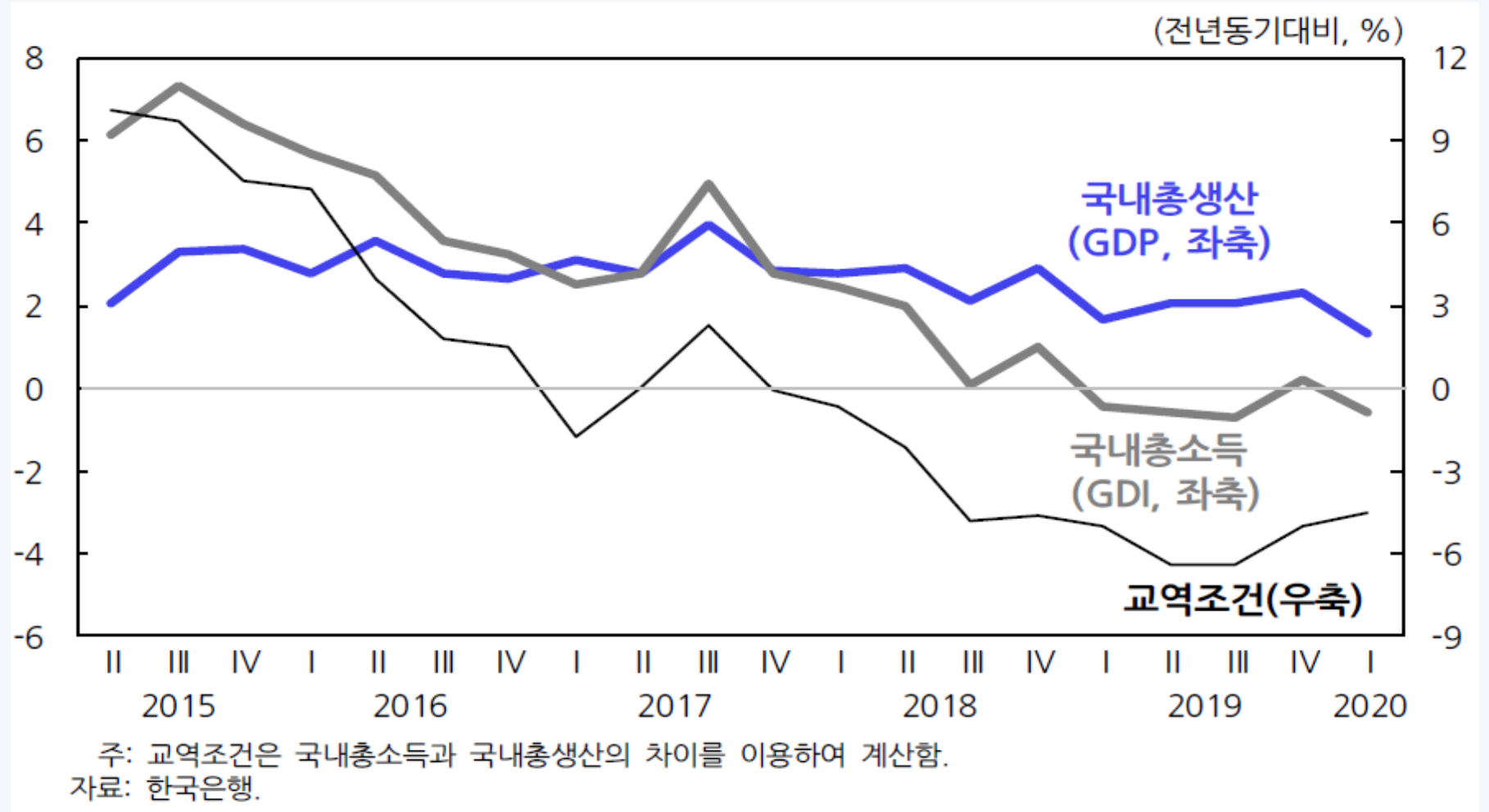
코로나19  
경제 동향

국내 경제

전제

- 총생산 전기 대비 -1.4%
- 총소득 전기대비 -0.6%

경기 전반 위축 - 국내 총생산, 총소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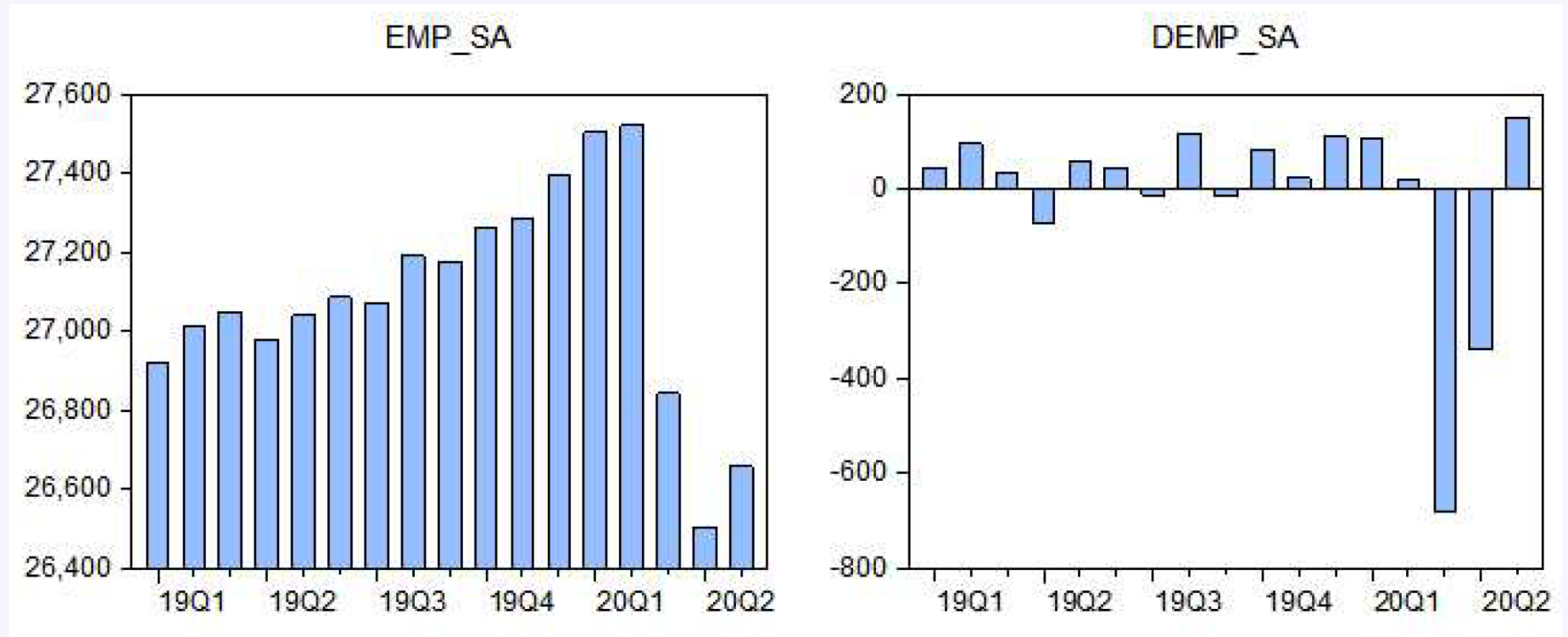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 02

### 코로나19 고용 동향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5, 계절조정, 단위: 천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 코로나 전(前)인 **2월 대비 5월 취업자는 87만 명 감소**  
(2월 대비 3월 취업자 68만 명 감소, 3월 대비 4월 취업자 34만 명 감소, **4월 대비 5월 취업자 15만 명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간 취업자 25만 감소
- 외환위기 첫 두 달 취업자 92만 명 감소 폭 넘어서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 03

코로나19  
정부 대책

#### 01 고용유지 지원

#### 02 기간산업안정기 금

#### 03 구직활동 지원

#### 04 가족돌봄 긴급 지원 등

##### ✓ 사업주엔

- 기존 고용유지 지원대상에 코로나19 관련사유 추가
- 매출액 등 감소하지 않아도 조업 중단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유급 휴직(특별고용지원업종 3개월, 일반 1개월) 이후 무급휴직 즉시 월 50만원 3개월 지원
- 6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2/3(우선지원대상 기업) ~1/2 지급
-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인건비 융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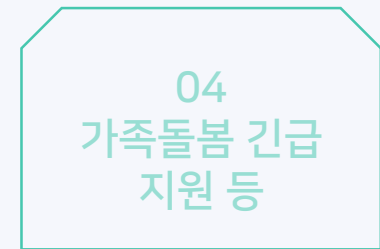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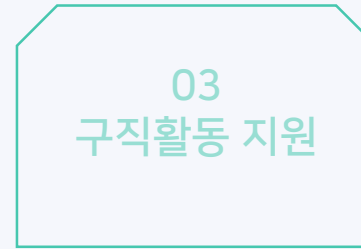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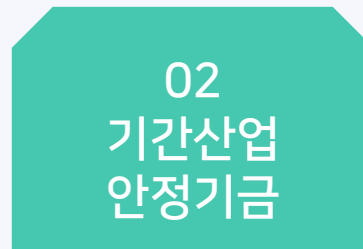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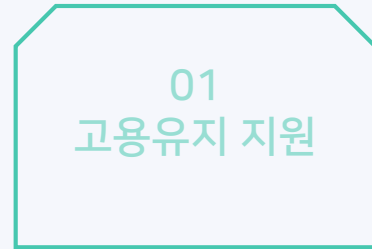
##### ✓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 비정규직 제외**

##### ✓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제외**

##### ✓ 근기법상 휴업수당 적용 안 되는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 ✓ 짧은 지원 기간, 3개월만 90% 지급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 ✓ 사업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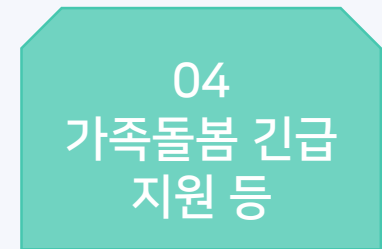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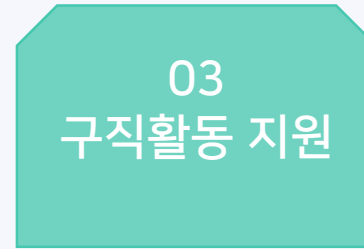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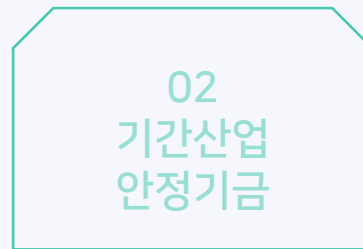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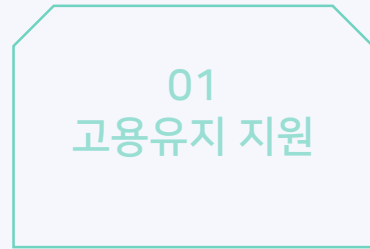
- '일정 수준' 고용 유지 위해 노사노력 전제 → 노동조건 관련 쟁점 가능성
- 90%만 고용유지 해도 지급 대상 → 해고 금지의무 x, 하청, 비정규직 제외
- 기금 지급 기간산업기업에 파산이나 기업구조조정 진행 외엔 의결권 행사 제한
- 기간산업안정자금운용심의회, 노동조합 참여 제한

※ 5. 1.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 4. 28. 정무위 통과, 4. 29. 법사위, 본회의 통과

-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기업 대상

## 1. 코로나 19가 몰고 온 경제, 현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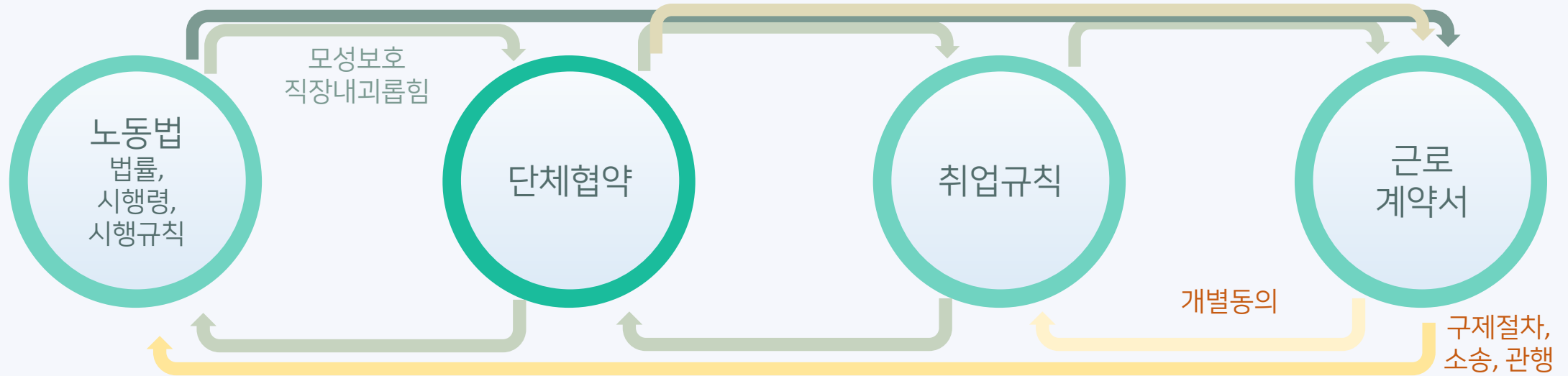
### ✓ 노동자 중

- 구직 촉진 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1,054,316원) 이하 월 50만원 3개월
- 청년 구직활동지원 : 졸업, 중퇴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
- 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 가족돌봄비용 **10일간** 지원

➡ 대상 노동자, 지원 내용 협소



##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노조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제4,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쟁의, 교섭, 단협체결, 교섭해태 부노

근기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기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1948  
~1963.  
12. 17.

1953  
근로  
기준법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2. 3. 17. 수출진흥정책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98.  
2. 20.

1998  
파견법

### 제정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  
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  
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  
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  
할 권리**가 있다.

1953	1954	1962	1975	1988
시행령에 따른 적용 제한	시행령에 따른 적용 제한	시행령에 따른 적용 제한	시행령에 따른 적용 제한	시행령에 따른 적용 제한
시행령 미제정	15인 이하 적용 제외	15인 이하 적용 제외 30인 미만 일부 적용 제외	4인 이하 적용 제외 5인 이상 16인 미만 일부 제외	5인 이상 모두 적용 4인 이하 일부 적용

### 정리해고 도입

1997. 3.  
긴박한 경영상 이유  
→  
1998. 2.  
경영악화 방지위한  
양도 인수합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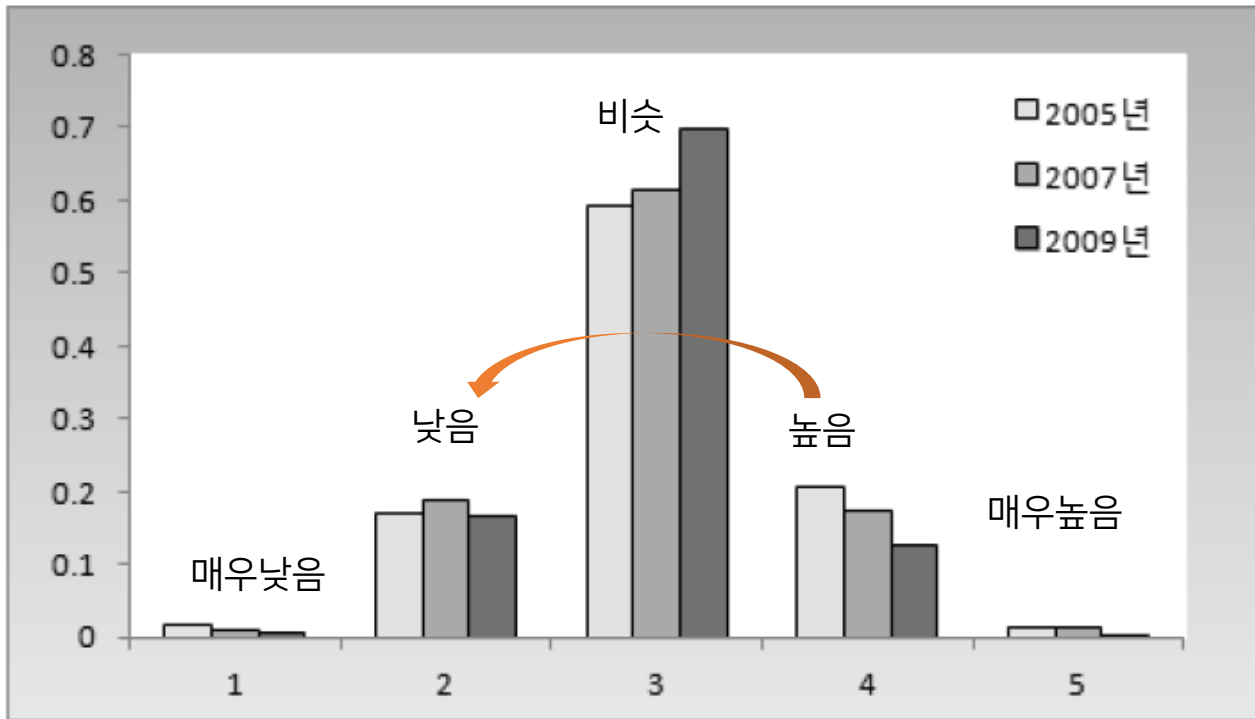
파견노동자 적용 제외  
근기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  
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  
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중간착취 합법화

##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이용이 정규직 임금에 미치는 효과-사업체 패널 분석

황선웅, 장희은 사업체 패널 조사 / 1,008개 사업장, 3,024개 표본 실증조사



[그림 1] 연도별 정규직 임금 5점 척도 분포

### ✓ 사업장 내 협상력 약화

노조 조직률, 이해관계 동질성 약화  
파업 파괴력 약화

### ✓ 상대적 낮은 임금으로 노동 유인 총족

정규직의 고용안정성

### ✓ 일자리 만족 기준점을 낮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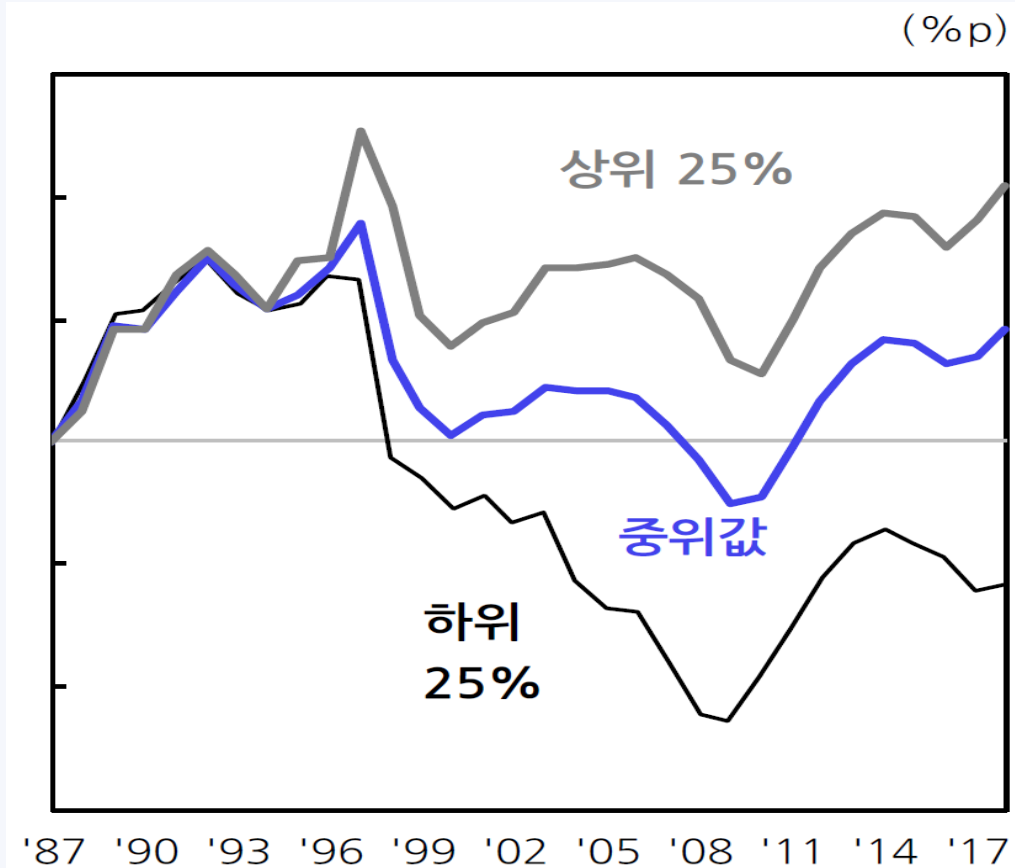
정규직의 주관적 일자리 만족도 ↑

### ✓ 성과배분 요구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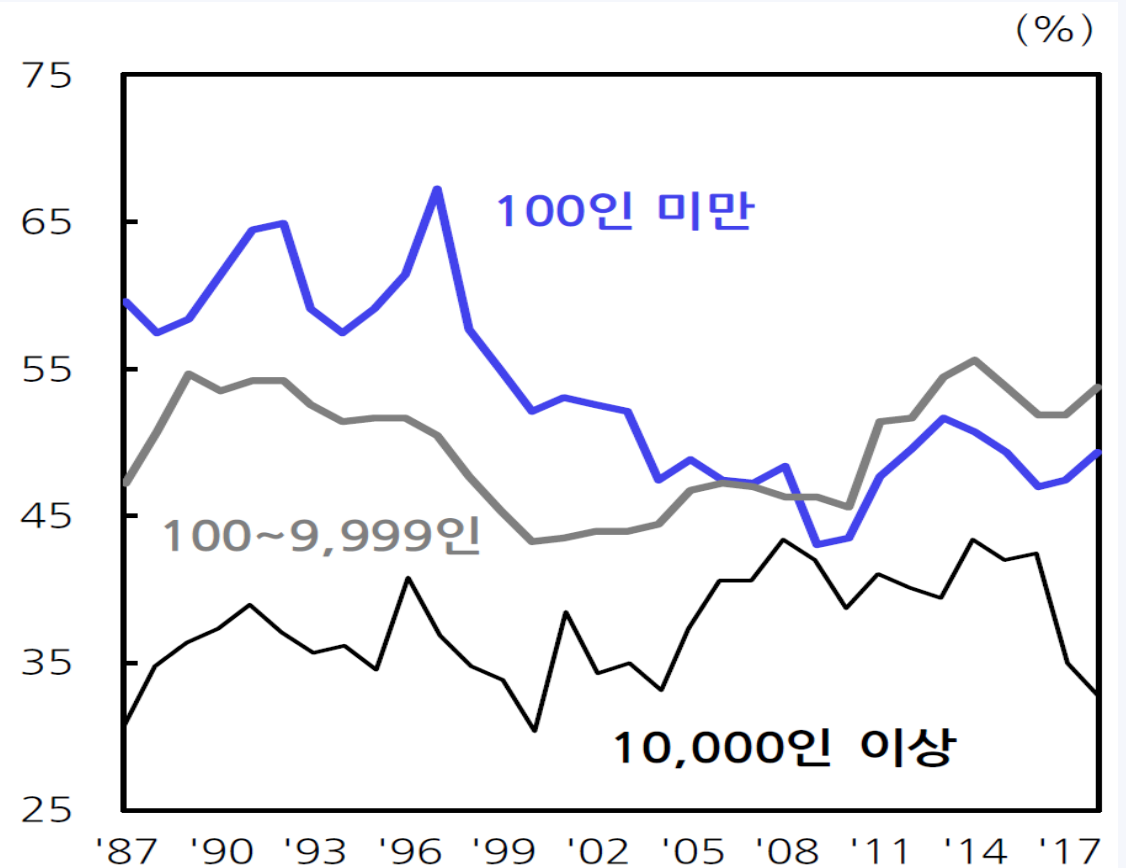
정규직 이기주의 비난 가능성

##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소득분배율의 분위별 추이 변화



노동소득분배율의 규모별 추이 변화



##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 후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책임은 적용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는 **적용 배제**



제23조 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금지 등 **해고관련 조항 적용 배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제25조 우선재고용 등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29조 구제신청에 따른 조사 등,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 이행강제금



제46조 사용자 귀책 시 휴업수당 지급 **적용 배제**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산지급,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계산의 특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등 **적용 배제**



제96조 단체협약 준수 의무 **적용 배제**  
제93조 이하 취업규칙 관련 **적용 배제**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등 **적용 배제**

## 2.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 노동부 노동위원회

노동부,  
근로감독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노동부 성과평가기준 개정  
모든 신규일자리, 노동법 적용과  
준수방안 마련

노동위원회,  
근로조건위반 손해신청 제도 개  
선

### 지방정부

지자체  
- 지자체 일자리 정책에 노동법  
준수 연계  
- 코로나19 지원사업에 해고 금  
지 원칙 반영  
- 명예근로감독관 노동법 이행  
점검

### 전태일3법 발의운동

가맹산하  
가맹산하-지부, 지회, 분회단위  
전태일3법 쟁취운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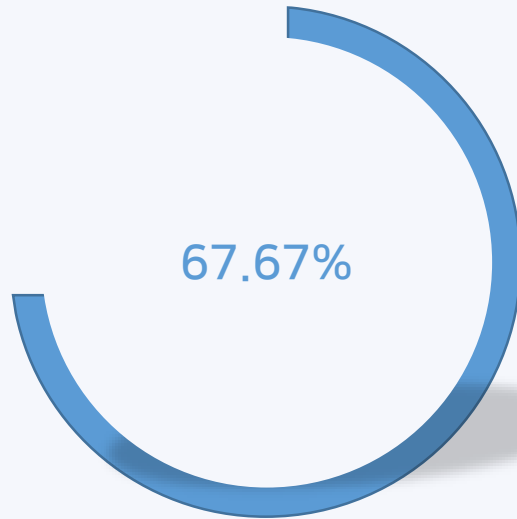
연대사업  
코로나19 시민사회대표자회의  
'사각지대 제로운동' 연대사업 확장

국회의원 동의 조직  
전태일3법 발의, 동의 조직사업

### 3.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 민주노총 핵심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

2019년 4월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1,014,840명 중  
비정규직 328,105명  
27.8% → 32.3% (2017년 대비 약 4.5%p 비정규직비율 증가)



### 3.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정책을 향한  
자본의 공격-노노갈등!

#### 정규직 일자리를 줄인다?

- ✓ 2006년부터 기간제 2년 후 정규직 전환 진행됐음  
하지만 신규채용 일자리 축소  
효과 없음 확인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된 공무원  
노동자 핵심요구는 인력충원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인력확대,  
교대제개편을 통한 일자리나누  
기 등

#### 입사절차 거친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 ✓ 공공부문 복잡한 채용경로, 오히려  
채용비리와 불합리한 고용형태를  
부추기는 원인
- ✓ 주된 업무가 유사한데도, 입사경로  
가 다르니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차  
별과 편견 '

#### 정규직 임금인상분을 비정규직이 빼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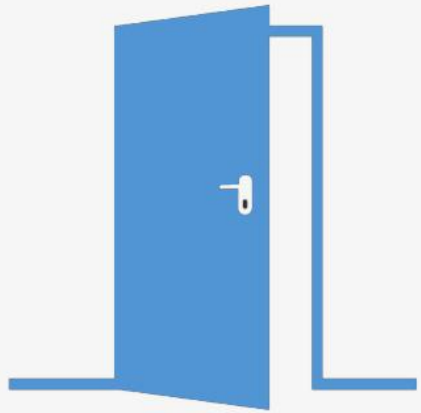
- ✓ 과거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아 왔음  
파이를 어떻게 나눌 지가 아닌 파이  
를 어떻게 키울까가 핵심
- ✓ 정부, 공공부문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시도,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임  
금삭감 우려있음  
인건비 예산확보와 차별해소를 위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와 공동  
투쟁이 관건!**



### 3.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노조법상 노동자성, 사용자성 인정되어야  
노동조합 만들어도 단체교섭까지는 요원

법원 노동자성 판단기준 완화  
인적 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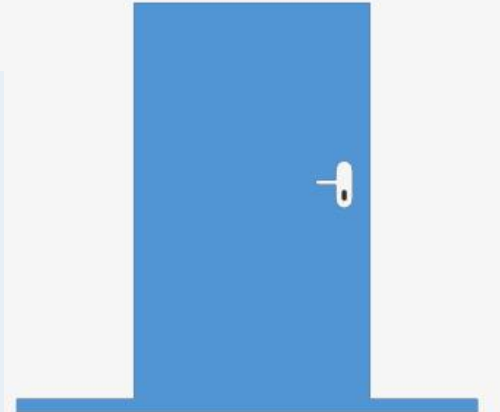
\***학습지산업노조**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되었으나 사용자는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공고 거부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계속 중

\***택배** 설립필증 교부 후 대리점주 교섭요구사실공고 거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용자성 인정해도 소송 계속 중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대리운전업체에서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부산지법은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했으나 소송 계속 중

\*간접고용 노동자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한** 있는 원청사용자가 교섭거부 및 조합활동 방해, 쟁의행위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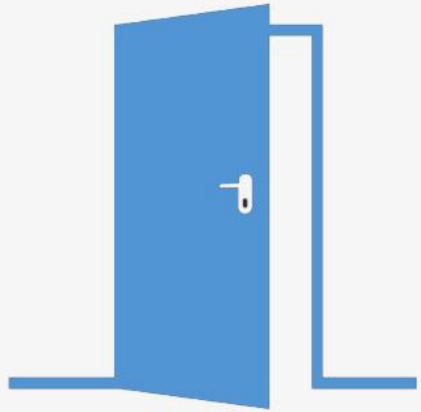
비정규직 교섭권, 쟁의권



### 3.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사용자, 사용자성 보장해야

법원 노동자성 판단기준 완화  
인적 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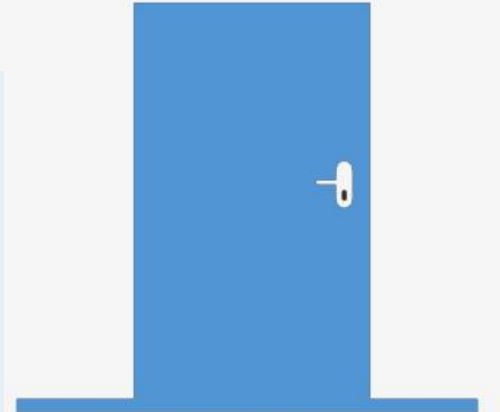


- **노동위원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아니면 쟁의조정 상대방인 노조법상 사용자성 부인
- **대법원**, 원청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성 인정(대법원 2007두8881판결)
- **하급심**, 교섭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울산지법 2017가합20070판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현대제철, 현대차, 한국지엠, 기아차, 아사히글라스 등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인정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2019년 금속노조 간접고용노동자들 쟁의조정신청,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조정 당사자 아님'의 행정지도

비정규직 교섭권, 쟁의권



### 3.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원청 사용자, 사용자성 보장해야

법원 노동자성 판단기준 완화  
인적 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

비정규직 교섭권, 쟁의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교섭권과 쟁의권 행사도 보장해야

디지털 특수고용 노동자, 본격적인 노동조합 설립 투쟁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투쟁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 사용자 교섭요구 공동투쟁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한화케미칼 황산누출 6명 사망	1500만원 벌금 공장장 집행유예
2008 이천 40명 사망	2000만원 벌금
대림 폭발사고 6명 사망, 11명 부상	공장장 8개월 징역 법인 3500만원 벌금
삼성전자 불산 누출	원청관리자 300~700만원 벌금
2012 이마트 냉동설비 4명 사망	100만원 벌금

VS  
한국  
산재사망 1명  
벌금 50만원

영국
캐나다
호주

2011  
기업살인법 제정  
노동자사망 1명, 15.4억 벌금

2003  
형법 개정, 산재사망기업 형사처벌  
하청, 모든 계약자 산재 적용

2003  
산업살인법 제정  
법인, 기업임원, 주무장관 책임  
다단계 도급에 원청 책임  
벌금 최고액 60억

##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미국에서 산재사망 사고 낸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관리소홀 책임  
**30억** 벌금

국내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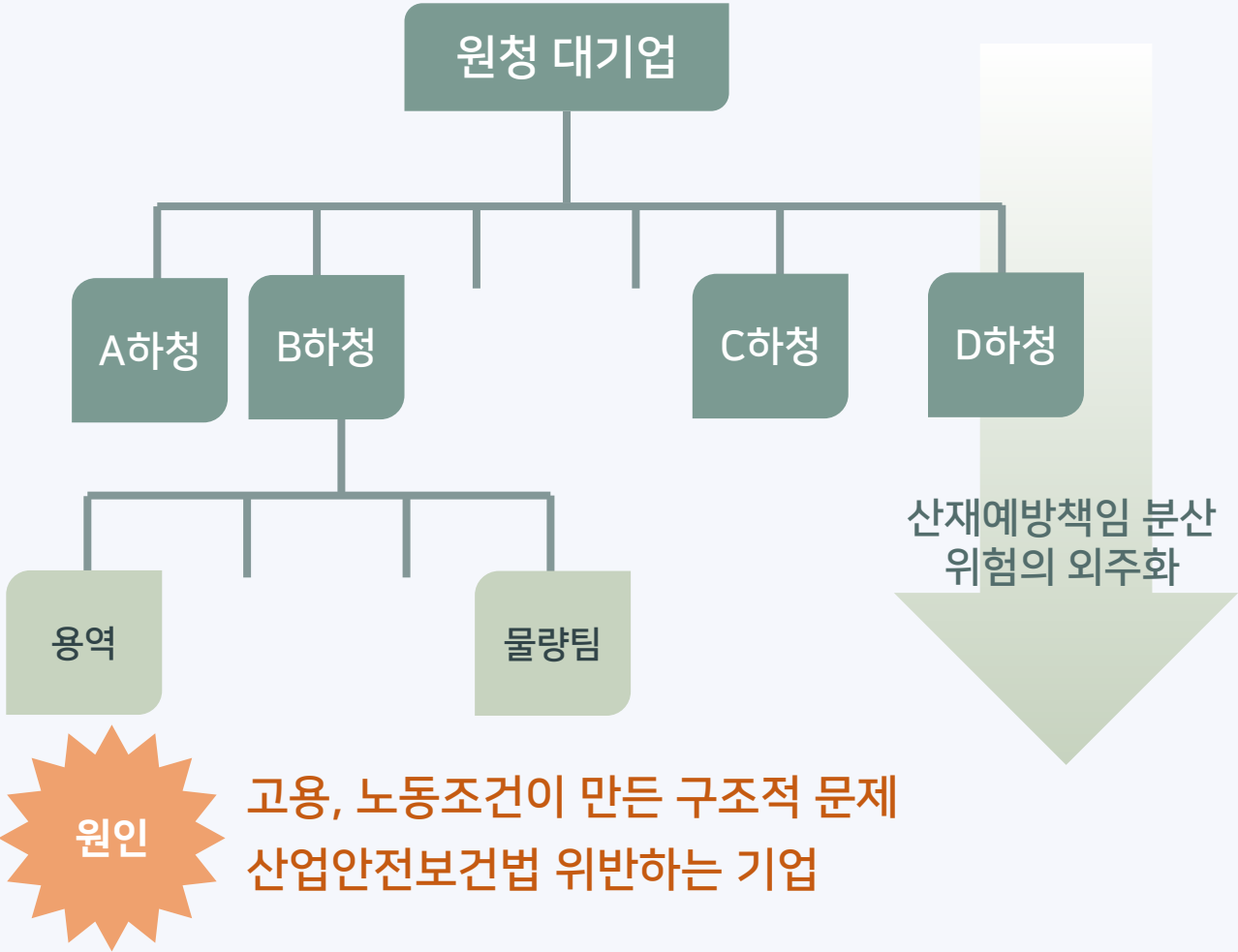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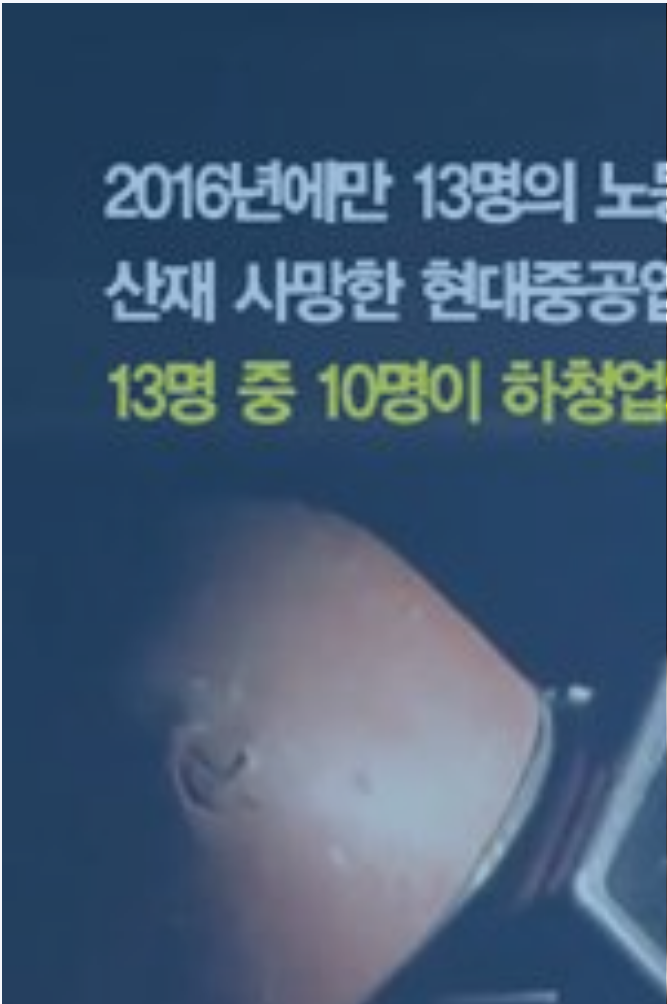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조항 한계

- ✓ 하급 관리자만 처벌
- ✓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 한계
-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 처벌 한계
- ✓ 처벌 양형 자체의 한계

### 업무상 과실치사죄 처벌조항 한계

- ✓ 구체적인 위반자에 따라 처벌
- ✓ 양벌 규정 없어 기업 처벌 못함
- ✓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처벌사실  
공표 등 행정 제재 담을 수 없음

####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모두 적용
- ✓ 기업법인, 최고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 등 처벌
- ✓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단계 하도급 등 하청 노동자 피해 시 원청 처벌
- ✓ 부실 인허가 등이 사고 원인일 때, 공무원 상위책임자 처벌
- ✓ 임대, 용역, 도급 및 위탁관리 시 공동의무 부과
- ✓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 위험방지의무 의무 부여, 처벌근거 마련
- ✓ 처벌 강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수정 보완 예정)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발족  
133개 단체 참가

산재, 재난참사 유족및  
피해자와 공동 투쟁

지역별 운동기구 발족  
대중사업 전면화



## 5. 전 조합원 전태일3법 쟁취투쟁



2019. 4. 6. 개정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국회 심사규칙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5. 전 조합원 전태일3법 쟁취투쟁

국민동의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동의종료 청원

위원회심사 청원

청원안내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답합니다.

청원 소개

청원 처리절차

청원 요건

청원 소개

1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  
petitions.assembly.go.kr

- 동의한 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할 경우 청원서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청원동의

취소

①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에 문자발송  
② 문자를 받은 조합원 링크를 따라 해당 청원 페이지 접속  
③ 비회원 휴대폰인증  
④ 입법청원 동의 1, 2, 3 완료

2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  
petitions.assembly.go.kr

로그인

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휴대폰이나 아이핀(I-PIN)으로 본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하기

Top

③ 비회원 휴대폰인증

3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  
petitions.assembly.go.kr

청원동의

취소

④ 입법청원 동의 1, 2, 3 완료

민주노총 26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전태일3법 쟁취투쟁

수고하셨습니다.